

제 2 장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황 의 식* · 문 한 필**

목 차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2년 농가경제 동향 2. 농가 소득원 동향과 전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농업 소득원 2.2. 농외 소득원 2.3. 2003년 농가소득 추정 3. 농가의 소득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도농간 소득격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2. 농가별 소득 증감 실태 3.3. 농가계층별 소득 격차 4. 농가부채 동향과 전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농가부채 동향 4.2. 농가부채 상환능력 4.3. 농가부채와 농가경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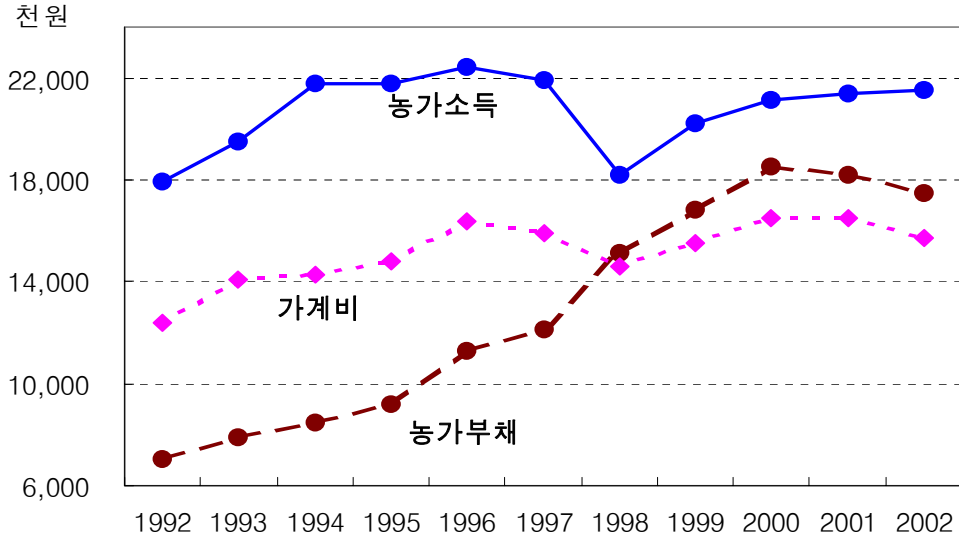
1. 2002년 농가경제 동향

- 2000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던 농가소득은 2002년에 명목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24,475천원이 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렇지만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쳐 아직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농가소득 증가를 소득원별로 보면, 농업소득이 0.1% 증가한것에 비해 농외소득은 4.0%, 이전소득은 5.2%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정체가 농가소득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 부연구위원. eshwang@krei.re.kr

** 초청연구위원. hanpil@krei.re.kr

그림 2-1. 농가소득, 가계비 및 농가 부채 추이(실질가격)



- 농가소득 구성을 보면, 농업소득이 11,274천원인 4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가 노동력을 활용하여 얻는 근로소득인 사업외 소득이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소득과 겸업소득은 각각 20.7%와 5.9%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간 3%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가장 낮은 증가율인 0.1%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농업여건의 악화가 농업소득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농가소득이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농가의 가계비와 농가 부채는 소폭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계비지출은 2002년에 명목으로 3.2% 감소하였고, 실질로는 4.9% 감소하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명목 가계비가 감소하였다. 그만큼 2002년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게 감소하던 분가지출은 2002년에 48.6%로 크게 증가한 반전 형상을 보였다. 가계비의 감소로 인하여 농가경제잉여는 2002년에 20.2% 증가하였다.

- 그 동안 연간 10% 이상으로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2001년에 증가추세가 둔화된 이후 2002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였다. 2002년도 호당평균 농가부채는 19,898천원이다. 농가부채 감소는 농가경제의 호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농신보 대위변제의 확대 등 농가퇴출과 자금 이용조건의 강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부채를 보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자금용 부채가 3.1% 감소하였고, 차입금 및 이자 상환용 부채도 10.9%로 크게 감소하여 농가부채대책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비용 부채도 2.5% 감소하였으며 재산적 지출을 위한 부채도 17.5%나 감소하였다. 반면 겸업자금 부채만이 3.9% 증가하였다.
- 농가자산은 명목상 1억 7,04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나, 반면 고정자산은 1억 2,815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 감소하였다. 토지자산도 1.2%가 감소하여 8,313만원이다. 2001년 농가자산 및 고정자산 증가율 4.2%와 3.0%와 비교하면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는 고정자산의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고정자산 감소가 농가부채 감소로 연계되고 있다.

2. 농가 소득원 동향과 전망

2.1. 농업 소득원

- 농가소득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은 호당 평균 11,274천원으로 2001년보다 0.1%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조수입이 1.2% 감소하였으나 양축비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농업경영비가 2.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질 농업조수입은 1992~2002년 사이에 31.9%가 증가한 반면 실질 농업경영비는 80.7%나 증가하였다. 농업조수입의 낮은 성장률과 농업경영비의 빠른 증가가 농업소득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그 결과 실질농업소득은 같은 기간에 9.2%만 증가하였다.

그림 2-2. 실질 농업소득,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증가 추이(1992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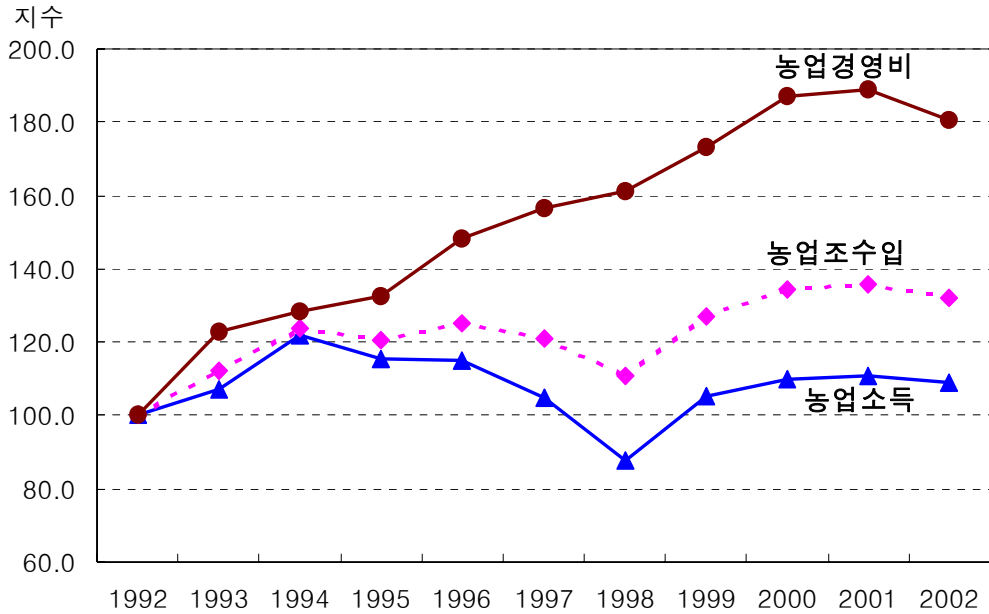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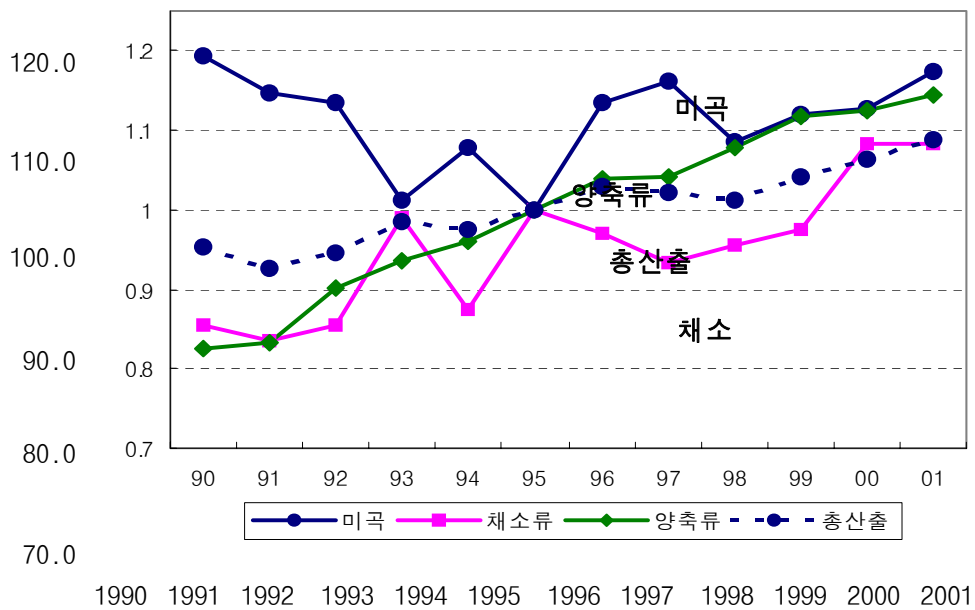


그림 2-3. 품목별 생산량 지수 추이(1995년=100)



- 농업소득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농업생산량이 둔화되었다기 보다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기준으로 산출량 지수를 보면, 생산량은 1999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곡과 축산류 생산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 부문 전체적으로는 생산량이 9%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가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농업소득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 농가의 농업교역조건을 보면, 농업소득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용품구입가격지수는 1998년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농업용품구입가격 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표현되는 농업교역조건은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2년에는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업교역조건이 양호한 1996년에는 도농간 소득비율이 90% 이상이었으나 크게 악화된 1998년 이후에는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2-4. 농업교역조건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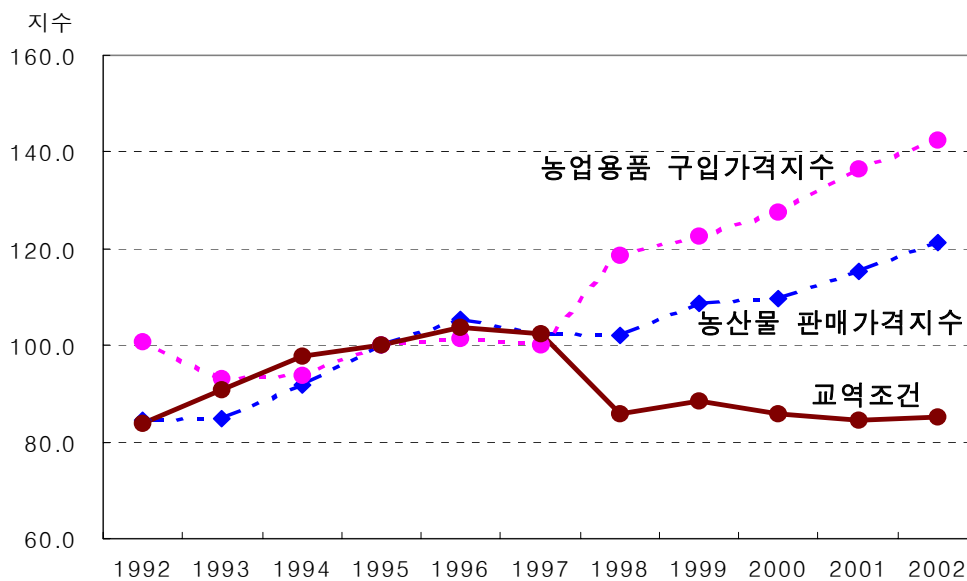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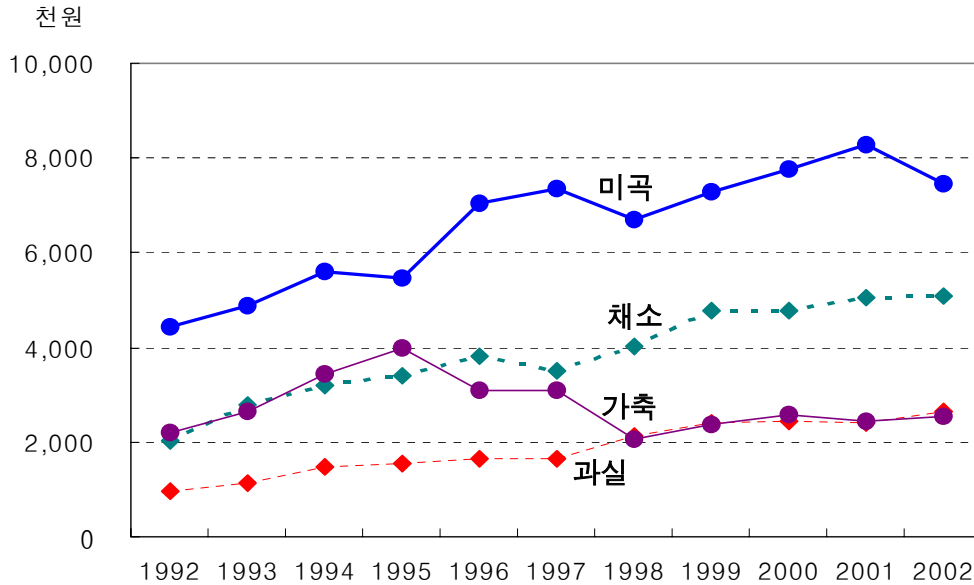


그림 2-5. 품목별 농업조수입 추이(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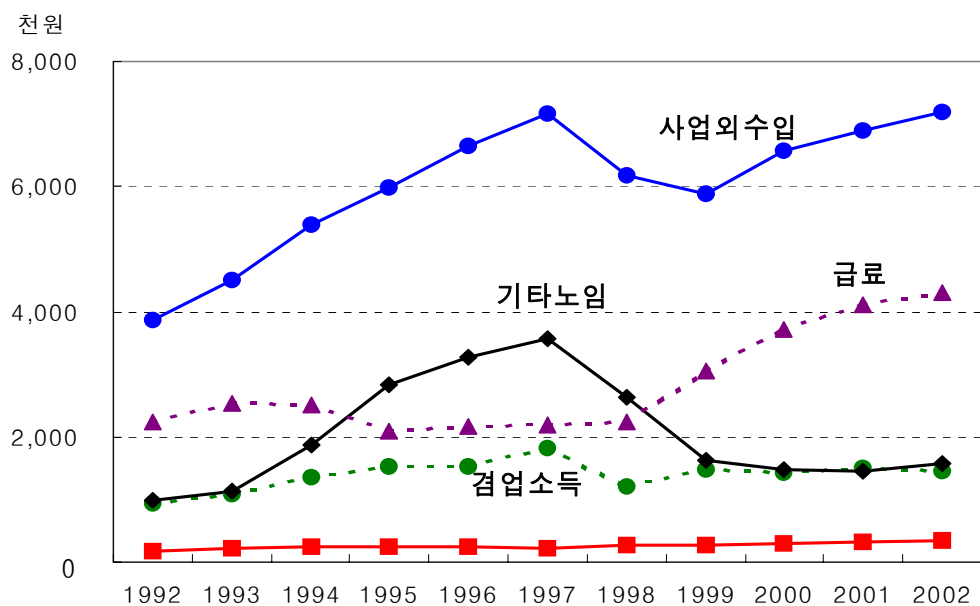


- 품목별 농업조수입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곡은 가격하락으로 2002년에 그 비중이 37.4%로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채소가 25.6%, 과수와 축산이 13.2%, 12.8%를 차지하고 있다. 미곡 조수입이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보다 9.7%나 감소한 것이 농업조수입 하락을 선도하고 있다. 채소 조수입은 0.7% 증가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과수 조수입은 가격상승으로 9.4%나 증가하였다. 축산물 조수입도 5.6% 증가하였다.
- 2003년도 농업소득은 태풍 매미의 피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농가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명목으로는 2002년보다 3.6%가 증가한 11,683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소득으로는 약 1.3% 증가한 10,044천원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농가판매가격은 2002년보다 재배업부문에서는 6.4%, 축산업부문에서는 6.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이 생산량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다.

2.2. 농외 소득원

- 농외소득은 농업이외의 사업을 자영하여 얻는 겸업소득과 농가 가구원이 취업하여 얻는 급료 및 노임소득인 사업외 소득으로 구성된다. 2002년 농외소득은 전년도보다 4.0%가 증가한 8,140천원으로 농가소득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농외소득에서 82.1%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외 소득은 6,68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5%가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1,45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가 감소하였다. 사업외 소득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취업인 급료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5.1% 증가하였다.
- 한편 농가의 또 다른 수입원인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5.2%가 증가한 5,060천원으로 농가소득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수입에서 연금 등 공적보조는 호당 평균 58만원이다. 공적보조는 2001년의 47만원보다 23.7%가 증가하였다.

그림 2-6. 농외소득원별 성장추이



- 2003년도 농외소득은 명목으로는 2002년보다 3.9%가 증가한 호당 평균 8,457천원에 이르고, 실질 농외소득은 1.6%가 증가한 7,271천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전소득은 명목소득이 2.8% 증가한 5,199천원에 이르고, 실질로는 0.4%가 증가한 4,469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3. 2003년 농가소득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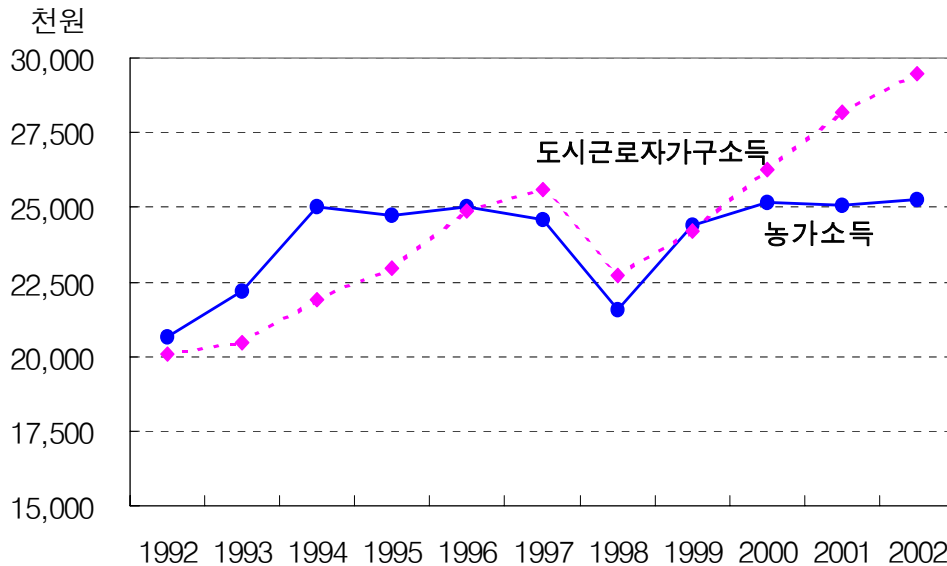
- 2003년도 농가소득은 명목으로는 2002년의 24,474천원보다 3.5%가 증가한 호당 평균 25,339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농가소득은 21,785천원으로 전년보다 1.2%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도 농가소득은 2002년보다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3.5%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시장개방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이것이 농가소득 정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에 따라 농가소득과 도시가구 소득 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완화하는 것이 농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영향이 큰 당분간은 선진국과 같이 감소한 농업소득을 직접지불제로 보전하여 주는 소득보전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보조는 호당 평균 59만원으로 농가소득의 2.4%에 불과하고, 일본의 20%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3. 농가의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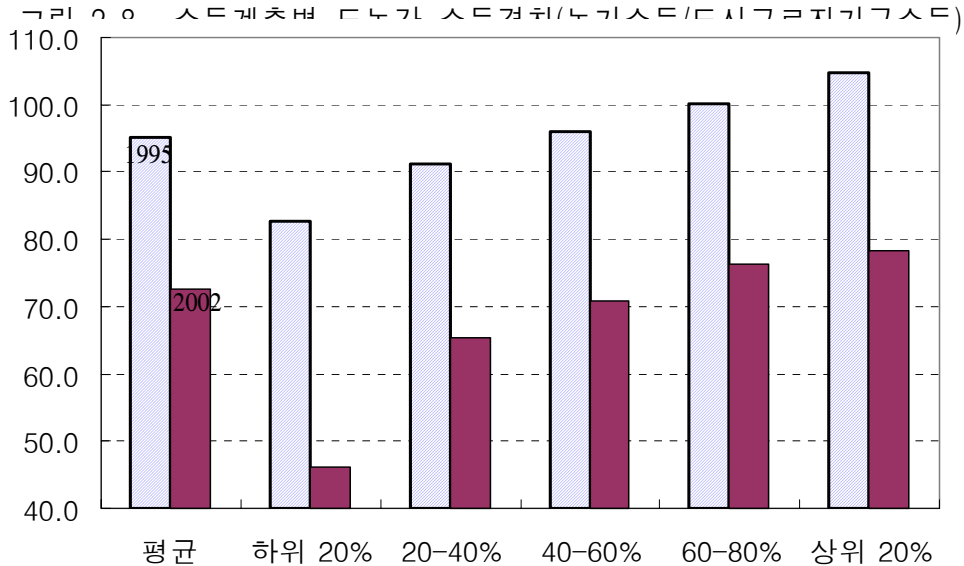
3.1. 도농간 소득격차

- 2000년대의 농가소득 변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6.4%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2.4%만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1년에 76%에서 2002년에는 73%로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2-7. 1ha 이상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추이



-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시근로자가구는 60세 미만의 상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소득 조사하고 있는 반면 농가소득 조사 표본에는 60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55.4%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득창출능력에서 차이가 있어 소득격차는 발생되기 마련이다. 평균농가의 소득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가소득 성장추세를 가늠하는 한 지표가 된다.
-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가를 1ha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격차를 비교하였다. 이들 농가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농업수익성이 좋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농가소득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격차가 발생하여 2002년에는 1ha 이상 농가의 호당평균 소득이 2,869만원으로 도농간 소득비율이 85.6%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농업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1ha 이상의 농가에서도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를 소득계층별로 소득격차를 비교하여 보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격차가 가장 크다. 이 계층의 2002년 농가 소득은 도시가구의 4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상위 20% 소득계층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약간 개선되었다. 이 계층의 농가소득 수준은 1995년에 100% 이상이였으나 2001년에는 76%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었지만 2002년에는 78.2%로 약간 개선되었다.
-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 낮은 것이 보편적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농가소득이 일반가구 소득보다 높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은 농가소득이 일반가구 소득보다 50% 이상 높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가의 범위를 영세고령농가는 제외하고 전업농가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더 높게 나타난다. 우리도 농가를 1ha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도농간 소득비율은 1999년에 100% 수준에 이르고, 2002년에는 85.6%에 이른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인 일본에서도 2002년 판매농가의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약 21.4% 정도 높다.

- 농가소득이 일반가구 소득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최근 10년간 일반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농가소득의 상대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에 의한 소득보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3.2. 농가별 소득 증감 실태

-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개별농가별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증감 상태는 농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경제조사 표본에서 동일 농가를 선정하여 명목소득의 증감상태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증가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도 많았다. 명목으로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3.9%이고, 소득이 감소한 농가도 39.7%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44.9%이다. 소득이 감소한 농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농가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노동능력의 저하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반면 농업소득 증감상태는 농가소득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에 농업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33.3%로 농가소득 감소농가의 비율 23.9%보다 더 높고,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47.8%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5% 이상 농업소득이 증가한 농가는 37.3%에 불과하다. 농가분포에서 농가소득의 증감률별보다

표 2-1.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연평균 증감율별 농가분포(1998~2002년)
단위: 호, (%)

	5% 감소	5~0%감소	0~5%증가	5~10%증가	10%이상증가	합계
농가소득	560 (23.9)	371 (15.8)	363 (15.4)	375 (16.0)	679 (28.9)	2,348 (100.0)
농업소득	783 (33.3)	340 (14.5)	351 (14.9)	257 (11.0)	617 (26.3)	2,348 (100.0)

농업소득 증감률이 더 악화된 것이다. 1998년 이후 농업여건이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정체가 농가소득 증대를 억제하고 있고, 이것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농가계층별 소득 격차

3.3.1. 경영규모별 소득격차

- 농가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0ha 이상의 대농층은 1990년 44천호에서 2000년에 85천호로 2배정도 증가하여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균농가의 경작규모는 1990년 3,667평에서 2002년에는 4,370평으로 19.2%만이 증가하여 경영규모 확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실질농업자본액은 같은 기간에 호당 15,928천원에서 28,272천원으로 77.5% 증가하였다. 경지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자본투자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경영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 기준인 경지면적만으로 농가경영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농업고정자본을 고려한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여 경영규모를 평가해야 한다. 표준영농규모(SSF)는 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영규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시설물 등도 경영규모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SSF = L_C + \frac{FA}{L_P}$$

L_C : 경지면적

FA : 농업용 고정자산

L_P : 농지의 수익가격

표 2-2. 경지규모, 표준영농규모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

단위: 천원

		농가비율(%)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부채
경지규모	1ha미만	45.2	20,857 (100.0)	4,966	14,978
	1-2ha	30.8	25,356 (121.6)	13,188	18,043
	2-3ha	13.9	30,177 (144.7)	17,717	26,790
	3-5ha	7.1	36,256 (173.8)	24,714	41,616
	5ha 이상	3.0	51,087 (244.9)	39,760	73,113
표준영농규모 (SSF 규모)	1ha미만	36.5	18,873 (100.0)	3,001	10,926
	1-2ha	32.5	22,987 (121.8)	9,494	17,821
	2-3ha	15.5	27,387 (145.1)	15,968	25,649
	3-5ha	11.5	34,830 (184.5)	23,055	42,650
	5ha 이상	4.0	42,548 (225.4)	30,240	70,722

- 표준영농규모별 소득격차를 보면, 1ha 미만의 농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경지규모에 의한 소득차이보다 축소되고 있다. 표준영농규모 2~3ha 농가의 소득수준은 1ha 미만의 농가에 비해 1.45배로 높고, 5ha 이상의 농가는 2.25배 높다. 이는 농가가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시설투자의 수익성이 낮다. 경작규모에 의한 농가 간 소득격차는 2002년이 2001년보다 개선되었지만 표준영농규모에 의한 소득격차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표준영농규모로 조정하였을 때 3ha 이상의 경영규모를 유지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 표준영농규모로 조정한 농가규모별 농가소득 구성비율을 보면, 1ha 미만의 농가에서는 농업비중이 15.9%로 매우 낮고, 반면 근로소득인 사업외소득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ha 이상의 농가에서는 농업소득 의존도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외소득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계층별로 농가소득 증대정책에서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농가의 35% 정도인 2ha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 증대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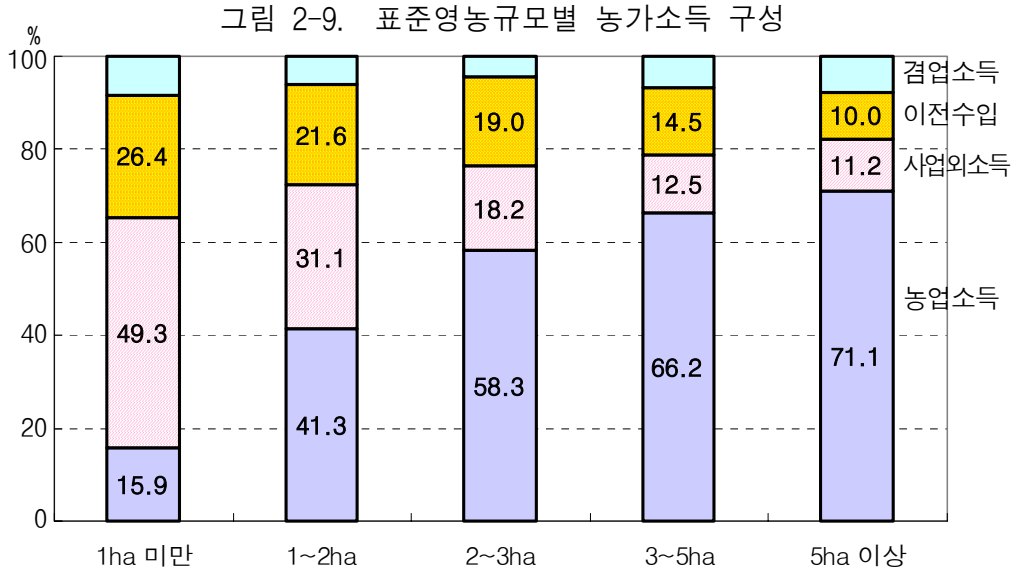


표 2-3.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단위: 천원, %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70세	70세 이상
농가소득	26,145 (100)	28,782 (100)	29,464 (100)	21,365 (100)	13,508 (100)
농업소득	9,906 (37.9)	14,839 (51.6)	12,797 (43.4)	8,767 (41.0)	3,930 (29.1)
사업외소득	8,985 (34.4)	8,244 (28.6)	9,083 (30.8)	6,063 (28.4)	3,625 (26.8)
이전소득	3,931 (15.0)	3,261 (11.3)	5,706 (19.4)	5,508 (25.8)	5,318 (39.4)
농가부채	34,597	39,864	25,456	11,582	4,863

3.3.2. 연령별 소득격차

- 농업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30~60세 사이의 전업적 영농인력이 있는 경우 경영주보다 전업영농인력의 연령을 적용하였다. 농가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 농가로 2,9464만원 수준이고, 다음으로 40대 농가가 2,615만원으로 농가소득이 높다. 60세 이상의 농가는 평균소득보다 낮다.

- 연령별로 2001년과 2002년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50대 농가는 2,673만원에서 2,946만원으로 증가하였고, 40대 농가도 2,605만원에서 2,87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40세 이하의 농가는 2,784만원에서 2,615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40~60세 농가소득은 2,900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86.5% 수준인 반면 60대 농가는 63.8%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농가의 낮은 소득이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에 나타난 것이다.
- 경영주 연령별로 소득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대 농가는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상이고, 40세 미만의 농가는 농업소득 비중이 전년의 47.6%에서 37.9%로 크게 하락하였다. 40세 미만의 농가는 농가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그 요인이 농업소득 감소 때문이다.

3.3.3.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 농가소득계층간 소득격차를 보면,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소득비율은 1995년에 17.9%에서 2001년에는 11.2%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농가 간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위 40%까지의 농가가 명목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소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소득계층별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비교

단위: 천원, %

		평균	하위 20%	20~40%	40~60%	60~80%	상위 20%	1분위/ 5분위
1995 (A)	농가	21,803	8,053	14,075	19,315	26,353	45,111	17.9
	도시	22,933	9,745	15,428	20,118	26,318	43,040	22.6
2001 (B)	농가	24,311	5,860	13,918	20,264	29,253	52,259	11.2
	도시	33,509	12,719	21,305	28,633	38,343	66,811	19.0
B/A	농가	111.5	72.8	98.9	104.9	111.0	115.8	
	도시	146.1	130.5	138.1	142.3	145.7	155.2	

-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는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더 심하고 그 격차도 더 확대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간 소득격차인 상위 20% 대비 하위 20% 소득비율은 19.0%로 1995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농가는 11.2%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4. 농가부채 동향과 전망

4.1. 농가부채 동향

- 그 동안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2002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여 호당 평균 19,898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가경제 호전으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농가의 퇴출 및 자산매각으로 부채상환이 확대되고, 차입여력이 약화된 것이 주 요인이다. 농가부채대책으로 농가의 상환부담이 완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평균농가의 측면에서는 농가부채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농가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없는 농가는 전년대비 2.7% 포인트나 증가하였고, 5천만원 이상의 농가도 0.1%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1~3천만원 사이의 농가비율은 1.6%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2000년과 비교하면 농가부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2-5.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추이

	1997	2000	2001	2002
부채 없음	20.4	24.1	26.0	28.7
1천만원 미만	42.6	27.7	26.5	26.0
1~3천만원	22.2	24.7	23.2	21.6
3~5천만원	14.8	10.4	11.2	10.5
5천만원 이상	-	13.1	13.1	13.3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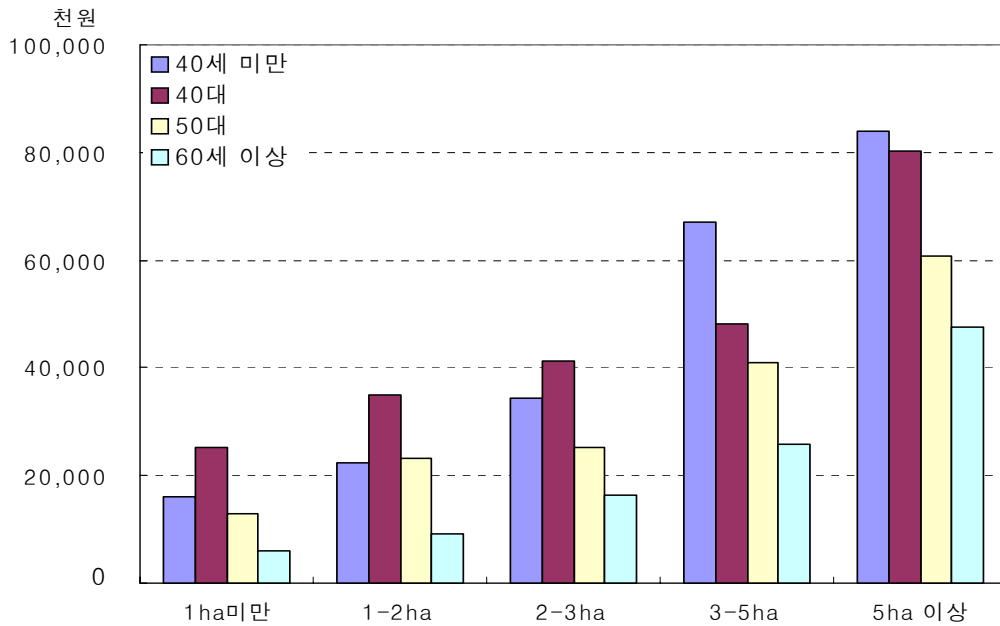
표 2-6. 경영주 연령별 부채규모 분포

단위: %, 호수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부채 없음	13.4 (16.7)	13.5 (13.0)	18.4 (19.4)	42.8 (41.0)
1천만원 미만	25.8 (17.1)	17.1 (19.4)	25.1 (25.2)	30.3 (30.3)
1~3천만원	20.4 (24.0)	23.1 (24.9)	28.3 (28.7)	17.4 (18.0)
3~5천만원	16.1 (20.2)	18.0 (15.7)	12.8 (14.0)	5.2 (6.2)
5천만원~1억원	18.3 (13.2)	19.3 (17.9)	11.0 (8.0)	3.4 (3.5)
1억원 이상	5.9 (8.9)	9.1 (9.2)	4.4 (4.8)	0.9 (1.0)
농가호수	186 (258)	616 (587)	820(839)	1,458 (1,357)

주 : ()는 2001년 분포자료

그림 2-10. 연령별, 표준영농규모별 농가 부채 규모



- 경영주 연령별 부채규모의 분포를 보면, 50세 이하의 젊은 영농층에서는 부채규모가 큰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농가에서는 부채가 없는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세 이하의 농가를 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부채 농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5천만원~1억원 사이의 고액부채 농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40대 농가에서는 3~5천만원 사이의 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50대 농가에서는 5천만원~1억원 사이의 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농가별 부채규모를 보면 40세 이하의 농가에서는 경영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의 부채규모가 많은 6,700만원 이상이다. 40대 농가는 전체적으로 부채규모가 큰 편인데 특히 3ha 이상이면 부채규모가 5,000만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50대 농가의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6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5ha 이상의 경영규모이면 부채규모가 5,0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4.2. 농가부채 상환능력

- 농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많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위험한 농가이고, 70%를 상회하면 부실농가로 평가한다. 2001년의 경우를 보면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상환능력을 가진 농가의 비율도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표 2-7. 부채규모별 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 %

비율 \ 규모	없음	1천만원 미만	1~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이상	합계
10% 미만	100(100)	89.3(88.1)	24.9(34.5)	3.4(7.3)	2.1(2.8)	-	57.8(59.1)
10~30%	-	10.1(11.2)	63.0(53.8)	51.2(58.8)	23.2(29.5)	7.8(10.7)	24.1(24.7)
30~40%	-	0.3(0.6)	6.6(6.4)	18.3(12.5)	19.1(21.3)	8.6(14.5)	5.6(5.4)
40~70%	-	0.4(0.1)	4.4(3.9)	19.6(18.0)	33.5(31.1)	35.3(39.7)	7.6(7.3)
70% 이상	-	-	1.2(1.4)	7.5(3.5)	22.2(15.3)	48.3(35.1)	5.0(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는 2001년 자료

- 농가의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30%미만인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규모가 크면 부채비율도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채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가에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 미만인 비율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천만원 미만인 농가에서도 94.7%가 부채비율이 40% 이하이다. 그러나 부채규모가 5천만원을 상회하면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가 급증한다. 5천~1억원의 부채를 가진 농가에서는 46.4%가 부채비율이 40% 이상이고,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농가에서는 74.8%가 부채비율이 40% 이상이다.
-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다른 한편으로 단기지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단기지급능력은 농가가 현재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원활히 상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단기지급능력은 장기 상환능력과 달리 다음 식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흐름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자이면 농가는 부족한 현금을 부채를 증가하거나 혹은 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text{단기지급능력지표} = \text{농가경제잉여} + \text{감가상각비} - \text{중장기 부채원금상환}$$

표 2-8. 단기지급능력 지표별 농가분포

단위: %

	단기 지급능력 부족 농가			단기지급 능력양호	합 계
	가계수지 적자				
	영농수지 적자				
1997	1.2	26.5	35.2	64.8	100.0
1998	8.8	40.2	49.9	51.1	100.0
1999	2.0	32.4	40.5	59.5	100.0
2000	3.3	30.5	38.3	61.7	100.0
2001	3.8	28.4	31.0	69.0	100.0
2002	4.7	27.2	30.3	69.7	100.0

주: 2001, 2002년에는 원금상환은 연초 중장기부채의 10%를 상환한 것으로 가정

- 농가소득 증가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비 감소에 의한 농가경제잉여의 증가로 2002년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은 약간 호전되고 있다. 영농수지 적자(마이너스 농업소득)인 농가의 비율은 2002년에 4.7%로 전년의 3.8%보다는 약간 증가하여 농업여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도 27.2%로 전년보다 0.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연초증장기부채의 원금상환 분(원금의 10%)까지 감안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단기지급능력 부족 농가의 비율은 30.3%로 전년보다 0.7%포인트가 개선되었다. 농가부채의 감소로 상환부담은 축소되었다.
- 전체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부채규모별로 보면 여전히 고액부채 농가에서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평균적으로는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부채규모가 3,000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인 농가 중 30% 이상이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이다. 부채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50% 이상이 단기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고액부채 농가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9. 부채규모별 농가 단기지급능력 분포, 2002

단위: %

	단기지급능력 부족농가			상 환 가능농가	계 [표본수]
	소득<가계지출	원금상환능력 적자	소계		
없음	28.3(26.4)	0.3(0.8)	28.6(27.2)	71.4(72.8)	100 [883]
1천만원미만	23.7(24.4)	1.8(0.9)	25.5(25.3)	74.5(74.7)	100 [801]
1~3천만원	25.3(28.9)	3.0(2.5)	28.3(31.3)	71.7(68.7)	100 [665]
3~5천만원	27.9(31.9)	7.8(4.4)	35.7(36.2)	64.3(63.8)	100 [322]
5천만~1억원	32.4(33.1)	7.9(8.3)	40.3(41.3)	59.7(58.7)	100 [293]
1억원이상	37.1(42.0)	9.5(12.2)	46.6(54.2)	53.4(45.8)	100 [116]
합 계	27.2(28.3)	3.1(2.7)	30.3(31.0)	69.7(69.0)	100 [3,080]

주: ()는 2001년 농가부채 단기지급능력 분포

4.3. 농가부채와 농가경제

- 부채는 농가경제 불안정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농가가 성장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의 폭이 크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크게 증가한 농가도 많다. 부채가 없는 것보다는 부채를 잘 활용하면 농가경제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가를 부채규모 3,000만원과 자산대비 부채비율 40%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농가부채와 농가소득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1998~2002년 5년 동안의 평균 농가소득을 보면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더 높았다. 부채규모가 적은 농가는 농업소득이 적었고, 그에 따라 농가소득도 낮았다.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를 부채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부채가 3,000만원 이하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2,195만원인데 반해 3,000만원 이상인 농가의 소득은 3,24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부채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2-10.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가부채

단위: 천원

		부채비율 40% 이하 농가	부채비율 40% 이상 농가
부채 3천만원 이하 농가	농가소득	21,948	18,214
	농업소득	9,599	7,052
	농가부채	7,359	20,869
부채 3천만원 이상 농가	농가소득	32,419	24,078
	농업소득	18,814	12,598
	농가부채	48,091	71,260

- 그러나 동일한 부채규모이면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가경제 상태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규모가 3,0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부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3,242만원인데 반해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의 소득은 2,408만원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부채규모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더 낮다. 이는 부채규모의 절대적 크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 특히 농가부채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변동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판매가격도 정체되어 농업생산의 수익성이 정체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부충격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농가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부채를 확대하기 보다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